

지방자치 부활부터 특별자치도까지... 전북 30년 변화의 역사

자치분권 · 지역균형 동시에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이 날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기념하고자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으며, 2023년 7월 두 기념일을 통합해 현재 명칭이 됐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북 지방자치 30년은 '기반 다지기→경제 성장 가속화→균형·혁신 추구→자치권 확대'로 요약된다. 개발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중앙 의존에서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은 30년 자치 여정의 결실이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전북의 주요 성과와 흐름을 조명한다.

1995년 6월 27일, 첫 지방선거를 통해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전북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에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30년간 전북은 행정기반 구축부터 대규모 산업 유치,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인프라 구축 · 경제 성장 · 혁신 추구, 전북의 3단 도약

▲민선 1~2기: 자치의 기초를 다지다

1995년에 출범한 민선 1기는 6개 시 8개 군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기반 구축, 도로·상하수도·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 전주 2002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 등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을 높이며 도민 중심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민선 2기에는 군산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본격적인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이뤄졌다. 사회복지시설 확대, 문화·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했다.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와 재배 관리 기술 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힘썼다.

▲민선 3~4기: 성장 기반 다지기 와 투자 유치

민선 3기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도약의 토대를 닦았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및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법제도 기틀을 수립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에도 착수했다.

민선 4기는 '아시아의 새 관문,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내세우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 유치로 경제 체력을 확충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산업·관광지구 착공 등의 사업들이 본격화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했다.

▲민선 5~6기: 신성장동력과 삶의 질 병행

민선 5기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였다. 탄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탄소소재법 제정, 탄소밸리 조성 등 기반을 닦았다. 군산을 중심으로 상용차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생명산업은 종자부터 식품가공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6기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정책 영역 확장을 꾀했다. 탄소산업과 삼각농정, 토탈관광, 복지·환경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재난관

리·시설안전 체계 정비와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개최 등 문화·체육 역량을 키웠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88고속도로 확장 등 교통망도 개선됐다.

▲민선 7~8기: 혁신 성장에서 특별자치도 시대로

민선 7기는 익산·정읍·순창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고, 군산 조선소·GM 폐쇄에 맞서 미래형 자동차와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공항·항만·도로 등 SOC 건설과 금융 생태계 조성에 매진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했다.

2022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는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계획 수립 권한을 확보했다.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으며, 배터리·수소경제·재생에너지를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대광법과 피지컬AI,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 4대 SOC(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초광역 및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난 24일 글로스터호텔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 개막식.

전북, '인권의 빛'으로 물들다

전북자치도 인권문화축제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25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 일원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권문화축제는 '전북자치도, 인권의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연·전시·인권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24일 오전 11시 글로스터호텔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권 공연·체험·전시·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틀간 이어졌다. 개막식에는,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도민 인권지킴이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광철 전북도 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권정책, 인권문화 확산,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 인권 증진에 기여한 10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되는 '동주의詩월'은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을 기념하는 낭독 음악극으로 인간 존엄과 자유, 민족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오후에는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거리문화광장에서는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인권 홍보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육인권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인권 골든벨'이 개최돼, 도내 중학생 50개 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 증가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 결과, 최근 전북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17일자로 발령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와 같은 흐름으로, 도내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B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일반 감기와 달리 전염력이 높고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검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바이러스의 유행 여부를 매주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최근 검사 결과, A형(H3N2)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양성률은 전주 대비 약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급격한 검출 증가 추세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학교·보육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만호 기자

도, RE100 참여기업 지원 전략 마련 총력

용역보고회 개최... 전북형 RE100 이행 전략 · 정책 방향 집중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E100 참여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24일 RE100 참여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RE100 국내외 동향과 지역 여건을 공유하며 전북형 RE100 이행 전략과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RE100 참여 수혜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 여건과 국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도내 RE100 수요 기업의 어려움과 요구를 바탕으로 △전북형 RE100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목표 설정 △지원 추진전략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북형 RE100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전북형 RE100 특화모델을 구체화하고, 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321.5ha 해제 고시

전원주택 단지 · 체육시설 등 다양한 활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여건 변화로 활용이 어려워진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321.5ha를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 도면과 토지조서는 각 시·군 농지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제 대상지는 도로·철도·하천 설치나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지역으로, 실질적인 농업 생산성이낮은 곳

들이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의견 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로 확보된 부지는 앞으로 전원주택단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소공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도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도내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제로' ... 4년 연속 '무사고'

전북자치도, 민·관·군·경 공조체계 강화로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 전북' 구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여름철(5월 15일~10월 15일)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4년 연속 무사고를 이어갔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최우선 목표'인 인명피해 최소화 기조에 맞춰, 도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도는 '인명피해 없는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전대비부터 복구까지 모든 단계에서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도는 사전대비기간(2월 20일~5월 14일) 동안 시·군별 취약지역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요 침수위험지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해대책기간에는 도·시군·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5단계 대응체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595곳으로 확대 발굴하고, 하상도로·둔치주차장·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위험지역 1,618곳을 호우특보 시 선제 통제했다.

또한 D등급 저수지 81곳, 배수펌프장 145곳, 빗물받이 17만18천 개소를 집중 점검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집중호우시에는 침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135세대(255명)를 사전 대피시키고, 대피자에게 재난꾸러미를 지급하

는 등 '인명 중심 대응'을 실천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강우량, 하천 수위, 지반상태를 실시간 분석·예측해 침수 위험을 조기에 경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북의 재난관리가 '사후 복구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상황관단회의를 12차례 개최하고, 호우특보 발령 시마다 신속히 비상단계를 상향조정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차례 운영하여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42곳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담당자를 사전 배치하고, 단계별 대응계획과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마련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주민대피 설명회'를 운영해 대피기준과 장소, 지원사항 등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실제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관·군·경의 긴밀한 공조와 도민의 신속한 협조가 인명피해 '0명'의 원동력이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11월 15일~내년 3월 15일)에도 민관이 공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지혜 모아 답 찾는다

도, 제2차 상설협의체 개최... 축사매입 · 악취관리지역 지정 ·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저감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도와 김제시는 2025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했으며,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총 3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잔여 27개 축사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 이후 남게 되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계사 등 약 60개소의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정 범위와 시기 등을 함께 논의했다.

혁신도시 주변 전주시 남정동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에서도 둔사 2개소를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심으로 연평균 20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대상배출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김제 읍지면 일대의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2025년 8.5배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전북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

설협의체'를 출범하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상설협의체는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제조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자문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기반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대입수능시험장 66곳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음달 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반 28개 반 60명을 투입해 도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6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1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치분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시험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통로 확보 △출입구와 비상구 개방상태 점검 △시험장 내 장애요인 사전 제거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등기평가 시간 등 정숙이 요구되는 시간대에 소방시설이 오작동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험장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 및 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시험 전까지 반드시 조치가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만큼,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